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와 정치-기술적 과정

Online Series

2018. 07. 04. | CO 18-29

홍 민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다. 북·미 후속회담과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을 앞두고 우리의 고민은 퇴행적 '의구심'에 수동적으로 멈춰 있어선 안 된다. 비핵화의 정치적-기술적 리얼리티에 충실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의 핵심은 신속하고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전략'과 북·미가 향후 만들어갈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북한이 자발성, 대등함, 비핵화-경제발전 동시추진 등의 원칙 속에서 비핵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자발성이 강조된 비핵화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가 '비가역성'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동력 확보와 견인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내용의 포괄적 형식에 대한 의구심, 북·미 후속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북한의 '신속한 조치'가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슬그머니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태도 변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마침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북한 실무대표의 판문점 접촉,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월 5일 방북 일정이 나왔지만, 일각의 의구심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 대상과 규모의 방대함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비핵화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미 후속회담과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을 앞두고 우리의 고민은 퇴행적 ‘의구심’에 수동적으로 멈춰 있어선 안 된다. 비핵화의 정치적·기술적 리얼리티에 충실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라는 프레임은 비판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화 실행 주체인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이해와 북·미가 향후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의 윤곽을 그려 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가 ‘비가역성’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동력 확보와 견인 전략에 대한 고민이다.

CVID의 프레임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를 CVID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CVID’는 사실 구체적 방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도그마’에 해당한다. 비핵화의 구체적 경험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적 어법 차원에서 고안됐기 때문이다. CVID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에 의해 고안됐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초까지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2003년 5월 이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의심하며 ‘완전한(complete)’을 추가했다. 딕 체니 부통령, 존 볼턴 당시 국제안보·군축 담당 국무부 차관, 루이스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 로버트 조지프 백악관 비확산 국장 등 2003년 리비아 핵 포기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그 주인공이다.

협상 압박용 정치적 어법으로 고안된 CVID는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이 1차 6자회담에서 4차례, 2차 회담에서 14차례 언급하자 북한은 ‘폐전국에나 하는 요구’라며 강력 반발하여 결국 공동발표문을 내지 못했다. 북한은 CVID의 ‘완전한’과 ‘되돌릴 수 없는’이 보상 없이 핵 포기 협상에 무조건 임하라는 고압적 요구, 평화적 핵 이용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본 것이다. CVID는 6자회담 지속을 위태롭게 하는 한 요인이었다. 결국 4차 회담부터 미국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CVID 대신 ‘영구적으로 충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Permanently, Fully, Verifiable, Dismantle: PFVD)’라는 말을 사용했고 회담은

지속될 수 있었다. 이번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등장했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 해당하는 PVID를 두고 CVID보다 강한 요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실 과거 용법으로 보면 PVID는 CVID의 완성된 용법에 해당한다. 결국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완전한(C)’, ‘되돌릴 수 없는(I)’이 빠지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만 남게 되었다.

CVID는 북핵 불신의 정치적 용법으로 호명되면서 지금까지 왔다. CVID는 기원 자체가 ‘블랙박스’로 봉인된 채 북한의 비핵화와 동일시되어 왔고 절대적인 기술적 기준처럼 오인되어 왔다. 사실 CVID는 지금까지 비핵화 접근에 있어 문제 해결의 측면보다는 문제 양산의 측면이 많았다. 비핵화의 의지, 실천,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은 정치적 의지와 실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CVID를 비핵화의 전부나 결정적 문턱처럼 제시하는 것은 소모적인 오해와 불신을 만들어내고 협상과 실천에 있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결국 협상전략과 비핵화 실천엔 유용하다고 보기 힘들다. 완전, 검증가능, 불가역성 등은 상호적 신뢰의 과정보다는 일방적인 관철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고 판단하는 주체 역시 외부로 설정돼 있다. 외부에 의한 강제적 비핵화의 성격이 강하다. 불신과 강제를 함축한 CVID를 북한이 순순히 수용할리 없다. 그래서 신뢰와 자발적 의지를 동반한 비핵화가 중요한 이유다.

비핵화는 ‘정치-기술적 과정’

거칠게 대별하면 비핵화에 대한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전히 기술적인 차원의 과정을 펼쳐 놓고 그것을 비핵화로 얘기하는 경우이다.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가 최근 발표한 북한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의 ‘15년’은 그런 엄밀한 기술적 과정 중심의 비핵화 시간표다. 대부분의 핵공학 전문가들은 비핵화에 최소 5년 이상의 기술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기술적 과정 중심의 비핵화 시간표에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동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 누구 입장에서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의 확보인가라는 비가역성의 ‘주체’가 모호하게 처리된다.

다른 하나는 비가역성을 확보해 가는 현실 가능한 정치적 조건과 동력의 관점에서 비핵화를 보는 관점이다. ‘정치적 모멘텀과 동력’을 확보해 가는 타임 벨트 위에 비가역성을 확보해 가는 기술적 과정을 얹히는 방식이다. 가령 2년 6개월이란 ‘정치적 시간’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비가역성을 어떻게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접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2년 6개월이 끝나면 나머지 못 다한 잔여 비핵화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2년 6개월은 결정적인 정치적 시간으로 간주될 뿐, 잔여 비핵화는 새로운 정치적 동력을 확보해 가며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원래 정해진 ‘비핵화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핵화의 시간은 기술적 시간 이상으로 정치적 결정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핵화의 ‘비가역성’ 확보는 누구의 관점과 이해에 입각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북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 국의 입장과 전략적 관점에 따라 비핵화와 비가역성 확보를 위한 방법, 순서, 정치적 자원, 타이밍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가령 미국의 안보, 미국 내 정치적 현실, 정치적 타이밍, 미국의 대외정책 등에 중심을 둔 비가역성 내용과 비핵화 시간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비핵화’는 북·미 ‘빅딜’의 산물이다. 비핵화 시간표는 결과적으로 북·미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비가역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비핵화는 ‘정치-기술적 과정(politico-technical process)’이 될 수밖에 없다. 북·미의 정치적 시간과 동력 위에 비가역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는 기술적 스케줄을 전략적으로 촘촘하게 설정하는 정교한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초기 비핵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입장에서 최대한 비가역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하는 실용적 비핵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내 정치적 시간과 물리적 여건 상 짧은 시간 내 모든 대상에 대해 완전한 핵폐기를 동시에 달성하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잠정적인 비가역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대한 비핵화 대상을 비가역성 확보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 선별적·동시적으로 불능화 및 폐기 조치의 수준을 대상별로 달리해 일단 잠정적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령 핵물질 생산의 거점인 영변 핵심 핵시설에 대해 폐쇄(shutdown)하고 복구에 5년 이상 걸리는 높은 단계의 불능화 또는 폐기 작업을 우선 한다면, 그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복구 1~2년 이상이 걸리는 낮은 단계 또는 중간단계의 불능화부터 실행하는 것이다. 향후 점차적으로 각각에 대해 불능화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해체·폐기 절차를 밟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전략과 향후 전망(1) : 자발성에 기초한 비핵화

김정은 정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추론해 보면, 북한의 비핵화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자발성과 대등함, 그리고 경제발전을 수반한 비핵화다. 첫째, 자발성의 측면에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이 강제적으로 비핵화 당한다는 굴욕적 분위기를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자발적인 비핵화를 행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특히 ‘자발성’의 코드는 대내 통치 차원에서 중요하다. 제7기 3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발전으로 전략적 노선을 변경한 결정은 ‘자발적 비핵화’의 구도를 국내적으로 보이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진행되고 있는 북·미 사이의 조율은 상당 부분 이런 북한의 자발적 조치를 인정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자발적 조치가 갖는 정치적 함의 및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이해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조치는 올 연말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실행한 북부 핵실험장 폐기(미래 핵) 이외에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미래 ICBM 개발), 미사일 발사장 폐기(고정 발사장소 제거), 미사일 발사 지휘소와 레이더시설 폐기(발사통제능력 제거), 전략군 해체(발사실행 조직 제거), 핵무기연구소 해체(미래 핵기술 포기), 영변의 핵심 핵시설 폐쇄(shutdown) 및 높은 단계의 불능화 조치(미래 핵물질 생산능력 제한) 등 자체적인 핵·미사일 능력 제거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연말까지 일정 수준 취해진다면, 상당 수준의 비가역성이 북한의 자발성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운용 중인 전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트가 미국과 국제기구에 제출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연말까지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단계에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후 북한의 자발적 조치가 순조롭게 가시화되면 남·북·미 종전선언을, 신고 리스트가 확보되면 연락사무소 개설을, 그리고 연말에는 대북제재 유연화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는 북한이 신고한 리스트를 ‘신고검증’하기 위해 국제 컨소시엄 형태의 신고 검증단이 꾸려지고 북한을 방문하여 신고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고검증단은 미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P5(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핵군축검증국제파트너십(IPNDV) 등과 핵무기 통제 모니터링·검증, 핵군축·검증, 핵탄두 해체·검증, 군비통제 기술협력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해

은 각국의 실무그룹, 연구소, 전문가들이 합류할 수 있다. 신고검증을 통해 전체 규모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전체 비핵화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속하게 높은 비가역성을 일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상물을 구분하고 선별하여 각각에 대해 불능화·폐기·해체를 수준별로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정치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 안에 ‘높은 단계의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기술적 시간표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신고검증-폐기-폐기검증 등에 검증 받는 역할 이외에 폐기 및 검증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에 상응해서 유엔안보리 제재 유예 및 전면해제, 북·미 국교정상화 협상 또는 국교수립,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대북 핵정책 변경 등 추진될 필요가 있다.

‘높은 단계의 비가역성’이 확보된 2020년 9월 총회에서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남북한이 동시에 서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비확산조약(NPT)을 대신할 새로운 체제로 구상돼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핵무기 개발·보유·사용 위협을 전면 금지하고 핵무기 신고·안전조치·국제협력·분쟁해결 등 강력한 핵무기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한이 동시 서명·비준할 경우 한국이 핵무기를 배치·개발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사용위협을 하지 않도록 하고, 국제사회의 검증·감시 아래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2020년 유엔 총회 기간 핵무기금지조약에 남북 서명하는 의식을 거행한다면, 사실상 비핵화·평화체제 동시 달성이라는 ‘평화선언’의 의미를 담게 될 것이다.

7월 5일 방북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첫 단계에 해당하는 북한의 자발적 조치들의 준비 내용과 일정을 듣고 빠른 시간 내에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리스트의 확보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까지를 1단계로 본다면,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자발성이 관건이다. 이 자발성에 입각해 신고 리스트 제출까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2단계인 내년부터는 국제검증단의 역할과 검증·폐기 과정에서의 북한의 자발성이 모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제재해제, 국교수립, 평화협정, 군사적 위협 해소, 경제협력 등 보다 풍부한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① 비핵화(북한), ② 군사적 위협해소(미국), ③ 단계적 군비통제(남북) 등이 서로 적절하게 서로 맞물리며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높은 단계의 비가역성 확보라는 성과를 발판으로 비핵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치적 동력과 시스템을 보다 확고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전략과 향후 전망(2) : 대등함과 존중의 프로세스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 전략은 ‘대등한’ 구도의 프로세스이다. 북·미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여 협상과 실천을 하는 것이다. 어느 일방이 평가자가 되고 다른 한쪽이 평가를 받는 우열의 구도가 아닌 대등한 위상 아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 강조한 ‘신뢰’의 다른 이름은 존중과 대등함이다. 북한은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의 북중정상회담,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 총 여섯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다. 공식·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외교적 의전과 대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극진한 대접과 존중을 받았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이 보여준 정중함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장면으로 각인되었을 것으로 본다.

대화 자체를 보상으로 간주하는 미국에게 직접 대화와 담판을 요구해 왔지만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중한 회담 태도는 새로운 전략적 변화의 여지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미제국주의’에 대한 피포위의식과 혐오에 기초하여 성립된 북한의 대외관과 주민 설득담론은 북미관계 정상화, 정상국가와 경제발전으로 나아가는데서 매우 버거운 족쇄가 아닐 수 없다. 북미정상회담과 미국의 태도는 이런 족쇄를 풀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을 만들어 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명되든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변화’ 욕구와 의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북미관계는 내용적으로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 상호 정치적으로 조응하며 가는 구도 속에서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이 자주 만나 상호 존중의 언어와 몸짓을 통해 ‘신뢰’를 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전략과 향후 전망(3) : 비핵화와 경제발전의 동시 추구

세 번째 전략은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비핵화 이후가 아닌 비핵화 과정과 연동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발전’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준 개혁·개방 선언’으로 향후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치의 구심점을 ‘핵무력’에서 ‘경제발전’으로 전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경제발전 노선을 확고하게 취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사실상 장기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한이 정상국가와 ‘경제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세 차례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을 두고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이런 행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실상 ‘패싱’ 우려 속에 있던 중국을 ‘비핵화-체제안전보장’ 빅딜의 장에 초대한 것은 북한이다. 비핵화와 경제발전의 교차 지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차 북·중 정상회담에 경제 총사령탑인 박봉주 내각 총리와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박태성 당 중앙위 정무국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한 부분은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의 “불패성”을 언급하며 “친근한 벗과 동지로서 서로 배우고 참고하며 단결하고 협조”하여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자고 얘기했다. 중국이 걸어간 경제발전의 길로 북한을 안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북·중 사이의 경제협력은 우려보다는 비핵화와 경제발전(개혁·개방)에 대한 확실한 의지, 전략적 노선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련의 굵직한 정상회담을 치른 김정은 위원장이 모처럼 현지도를 재개하며 첫 행선지로 삼은 신의주 일대 방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 신도군 일대 비단섬을 현지도 한 것이다. 이 지역은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인 ‘황금평경제특구’가 포함된 지역으로 2011년 성대한 착공식을 한 바 있지만, 2013년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처형 이후 개발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신의주 일대 비단섬, 공장·기업소 현지도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에게는 경제발전 집중과 비핵화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를, 중국에게는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성과 경제발전 노선 의지를, 국내 주민들에게는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활성화와 관련해 양측의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마치며

정상회담 한 번에 모든 의구심이 해소되길 기대할 순 없다. 북·미는 포괄적 합의문 형식으로 ‘신뢰’ 이정표를 일단 전면에 걸었다. 반면 ‘신뢰’의 구체성과 디테일은 후속 회담과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전술을 취했다. 드러난 포괄과 감춰진 디테일의 이중 구도를 취한 것은 실제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합의문의 구체성을 증명해 가겠다는 양측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서로 조율되고 합의된 구체적 조치를 행동을 통해 증명해 가는 길을 택했다 볼 수 있다. 이제 자발성을 최대화하고 신뢰와 존중의 기초 아래 최대한 실용적으로 신속한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